



주간통일정세 2009-30(2009.07.20~07.2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북한,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 재개(7/24, 연합)

- ‘북한이 질병을 앓고 있는 김정일의 후계 옹립을 위한 미묘하고도 일관된 선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가 분석, 북한이 8년 전 처음 시작한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을 지난해 재개했으며 이제 그 작업의 초점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26)에게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
-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가 올해 5월 6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후계자 옹립 작업의 본격화가 2012년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
-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최근의 신호들은 몹시 미묘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또 지난 2월 북한의 한 TV방송 보도에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막내가 사회주의 원칙에 투철하다고 강조”하는 등 김정운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지적

● 김정운 칭송가 주민에 보급(7/24, 아사히 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정운씨를 칭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래가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불리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방북 기간 여러차례 이를 직접 들었음.
-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우리 김대장의 발걸음, 힘차게 한번 내딛으면 전국의 산하가 반기네”라는 등 김 대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北TV, 김정일 3월분 기록영화 방영(7/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3월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를 비롯해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희천발전소 등 주요 경제시설을 현지지도한 기록영화를 22일 오후 6시 방영, 40분 분량의 이번 3월분 방영은 지난 7월 15일 2월분 방영에 이어 7일만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 현지에서 지도(주체 98.3)’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번 기록영화도 그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목표 기한의 절반을 지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150일 전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이 영화에서도 두터운 외투차림의 김 위원장은 왼쪽 팔과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한두 걸음 걷는 것 외엔 지난해 8월 와병이전만큼 활발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음.
- 특히, 3월19일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시찰 대목에선 네 걸음정도 떼는 동안 왼쪽 다리가 약간 부자연스럽게 저는 모습이 포착됐고 모자를 벗은 머리의 술도 상당부분 듬성듬성해 보임.

나. 정치 관련

● 김영춘, 제국주의와 대결전 계속 중(7/26,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26일 정전협정 체결 56주년(7.27)을 맞아 평양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반미·반제국주의를 강조
- 그는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 미국과 남한, 일본의 “반공화국(반북) 제재 소동과 군사적 도발 책동”에 의해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우리는 적들의 제재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한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도발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위력한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통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

● 北, 북핵문제는 철두철미 북미대결(7/26, 노동신문)

- 7월 23일 태국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박근광 북한 대표단장(외무성 순회대사)은 “우리를 핵무장으로 떠민 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의 핵대결도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
- 박 대사는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이번 (북미) 대결의 발단이 된 것인 만큼 반드시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한·미 을지연습 계획 비난(7/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계획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북침



을 노린 합동군사연습 계획”이라며 이는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 **北조평통, 南통일백서 첫 비난(7/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남한의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9 통일백서’에 대해 “통일이라는 간판을 도용한 반통일 문서”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발표, 통일부가 백서에서 작년을 “남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기 위한 조정기”로 평가한 부분에 언급,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북남관계 실태를 왜곡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주장

● **北, 총탄 한발 바치기 운동 전개(7/23,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이 7월 들어 미국 등과의 ‘사투’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이 총탄 한발을 바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 국민에 철제품 등을 헌납하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
- 신문은 이 운동이 김일성 사망 15년이 되는 7월 8일부터 시작됐으며, “모두가 육탄이 돼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모든 반동파와의 사투를 결의하자!”라며 “10명이 대포 한 발! 1천명이 미사일 한 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 신문은 “북한 주민은 즉시 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바치는 초등학교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탄 몇 발을 바쳤느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

● **北, 식료일용공업성 신설(7/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2일 정령을 통해 식료일용공업성을 신설한다고 발표, 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제161호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일용공업성을 내온다”고 짙막하게 전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다. 경제 관련

● **北, ‘150일 전투’에 전업주부도 동원(7/23, 조선신보)**

-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150일 전투’가 북한에서 ‘가두녀성’이라고 불리는 전업 주부들까지 ‘자원’ 형식으로 노동현장에 동원
- 조선신보는 23일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열기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일에 전념하던 여성들의 일과도 바꾸어 놓았다”며 “조선민주여성동맹이 가두녀성들로 돌격대를 구성하고 중요 경제단위와 건설장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
- 여성동맹이 구성한 돌격대라는 점에서 ‘녀맹돌격대’로 불리는 가정주부 돌격대는 도, 시, 군별로 조직돼 평양시 가정주부들은 자강도 희천시의 희천발전소 건설장 등에 투입되는 등 북한 전역의 주요



건설장에 동원돼 7~10일 정도 노동지원 활동을 벌임.

-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완공된 원산청년발전소 현지 지도 때 이 발전소 건설 과정에 강원도 가정주부들로 구성된 ‘여맹돌격대’가 큰 역할을 했으며 높이 평가했다고 전함으로써 150일 전투에 가정주부들을 동원하게 된 배경을 시사, 신문은 “강원도에서 창조된 ‘녀맹돌격대’ 활동은 150일 전투를 계기로 전국에 일반화돼 가고 있다”고 소개

● 北, 정규사단도 김매기 동원(7/21,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농번기철을 맞아 정규사단 군인들까지 동원해 김매기 등의 농촌 일을 돕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1일 보도, 또 “지난 6월25일부터 황해남도 연안군과 배천군, 청단군 등 연백벌을 비롯한 농장들마다 군인들이 파견 나와” 있다며 “대부분 4군단 정규군 현역 사단과 연대들”이라고 설명

라. 군사 관련

● 北, 미사일 엔진 등 지하서 분산 생산(7/24, NHK)

-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과 첨단 부품을 평양 북부에 위치한 복수의 지하시설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24일 보도
- NHK는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보도하면서 미사일 개발의 실태를 외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지하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
-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엔진 부분을 수도 평양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평안북도 박천 근처의 지하시설에서, 또 탄두 부분은 박천의 북쪽에 위치한 군수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7/25, 조선신보)

- 평양 금성네거리에 6월 초 ‘속성음식 센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문을 열었다고 조선신보가 25일 소개
- 신문은 이 가게의 “협조대상”이 “위홀(외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싱가포르측은 설비만 제공하고 노력과 음식의 원자재는 모두 조선(북)측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식 패스트푸드점’인 점을 강조
- 가게의 차림표는 햄버거 대신 ‘다진 소고기와 빵’, 외플 대신 ‘구운 빵지짐’이라는 표현, 다른 메뉴는 100% 광어로 만든 ‘다진 물고기와 빵’,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남새(채소)와 빵’이 있으며 ‘다진 소고기와 빵+감자죽+김치’로 된 ‘정식’ 메뉴도 있다. 음료는 “각종 탄산물”과 ‘금강생맥주’를 제공, “인민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된 음식 가격은 다진 소고기와 빵이 190원(1.2유로), 금강생맥주가 76원(0.4유로) 선임.

-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하며 20대 여성 위주의 종업원 15명은 요리와 서빙을 함께 함.

● 北 신종플루 발생보고 아직 없어(7/25,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북한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신종 플루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WHO는 북한에서 신종 플루가 발병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했음,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위원회와 보건성 등은 신종 플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과 주민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北 최대 안과병원, 이동치료 활발(7/24, 조선신보)

- 북한 유일의 안과전문병원인 평양라이온스안과병원의 의사들이 ‘이동치료대’를 구성, 북한 전역을 돌며 환자 치료와 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소개
- 병원 류은희(48) 원장에 따르면 의사들은 2006년부터 이동치료대를 구성,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등 주요 공장, 기업소와 마을을 찾아 지난 3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과 일반 안과 치료를 해줌.

● 北, 최승희 창작무용 50여년만에 복원(7/23, 조선신보)

- 북한이 일제강점기에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의 창작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50여년만에 복원, 2010년 재연할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23일 보도
- 신문은 “1956년에 최승희가 창작한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가 50여년 만에 재연된다”며 북한 무용 관계자들은 이를 “조선무용을 세계적 예술의 경지에 끌어올릴 계기”로 삼고 있다고 소개, ‘사도성’이라는 성에 쳐들어온 왜적들에 대한 백성들의 투쟁과 그 과정에 싹튼 성주의 딸과 한 어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사도성의 이야기’는 4장으로 구성된 1시간 20분짜리 무용극으로 최승희가 대본, 안무, 연출을 도맡았었음..
- 조선무용가동맹 홍정화 서기장은, “발레 분야에는 무용극 작품이 많지만 민족적 춤가락만을 놓고 무용극을 만든 ‘사도성의 이야기’는 세계적 견지에서 보아도 희귀한 작품”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평가



- **北 집중호우 피해 없어(7/22,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에서 지난주 비가 많이 내렸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20일 현재 발생하지 않았다고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핀 야로 로드 평양사무소 소장이 밝힘. 로드 소장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주 평균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이번 주에는 북한 당국이 평양 외곽에 있는 댐의 물을 방류해 대동강이 약간 범람하긴 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소개
- **美태평양사령관, 北관심선박 추적 지원(7/22, 연합)**
 - 로버트 윌러드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관심있는 (북한) 선박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수상한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인 추적 방침을 밝힘.
- **北노동자들 ‘솜옷에 물뿌려’ 방화복 대신(7/21 연합; 조선신보)**
 - 북한은 지난 4월 하순부터 펼치고 있는 대중 노력 동원 ‘150일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초인적 노력, 자기희생 등의 사례들을 적극 선전하고 있음을 기관지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 평양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평양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두터운 솜옷에 물을 끼얹은 ‘방화복’ 차림으로 섭씨 300도의 보일러 속으로 뛰어들어 애기도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 **오스트리아, 北호화요트 사건 수사(7/25, 연합)**
 - 오스트리아 검찰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화요트 구매 사건과 관련,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인 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검찰 대변인은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 국적자로 보이는 한국인 1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는 오스트리아인을 중개인으로 삼아 이탈리아에서 호화요트와 자동차를 주문한 것에 대한 수사”라고 밝힘.
 - 이와 관련,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경찰 소식통을 인용, 이들 요트의 가격이 1천300만유로(한화 234억원)에 달하며 산업 스파이 활동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보도
- **日, 핵 관련 北기업 자산 동결(7/23, 연합)**
 - 일본 정부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라 북한의 핵 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



- 관리 등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힘.
- 출입국 금지 대상자는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 등으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입국 및 일본 경유 제3국행을 금지, 자산 동결은 핵 관련 기업인 남천강무역 등을 대상으로 함.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자산이 일본 내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스위스, 대북 금지품목 금융서비스 금지(7/22, 미국의소리방송)

-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1일 제재강화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대북 금지품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
- 스위스 정부는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 맞춰 후속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발표한 시행령의 부속서를 개정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인물과 기업, 기관들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담을 계획

나. 북·미 관계

● 北, 美에 직접 대화 타진(7/26, 산케이 신문)

-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미국과 대립해온 북한이 뉴욕 유엔대표부를 창구로 하는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에 직접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
-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북한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안이하게 대가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신문은 보도

● 유엔주재 北대사, 美와 양자대화에 관심(7/25, 연합)

- 북한은 미국과 양자 대화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24일 밝힘. 신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어떤 교섭에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 그는 그러나 “6자 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우리는 6자 회담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 신 대사는 또 북한이 계속 유엔 회원국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말에 “절대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답해 북한이 자국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서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밝힘.



● **美합참의장, 대북 압력 계속될 것(7/25, 연합)**

-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4일 북한이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멀린 합참의장은 미 국방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핵무기 없는 북한을 만드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목표”라면서 “그런(북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이어 미사일방어망의 일환으로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등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괜찮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과 같은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을 그곳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 **클린턴, 국제사회 北제재 적극 동참에 놀라(7/2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놀랐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 또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보유로 비롯한 군비경쟁이 시작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불안해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

● **클린턴, 北 엇박자 유감, 단호히 제재(7/2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태국 푸껫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ARF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과거 북한이 국제회담에서 강경발언을 하면 지원이 주어지곤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

● **北외무성, 클린턴에 ‘그 여자’ ‘소학교 녀학생’이라고 비유(7/23, 외무성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그 여자”라고 부르며 “때로는 소학교 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당에나 다니는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험담
- 클린턴 장관이 최근 북한을 “관심끌려고 보체는 꼬마이자 철부지 10대” 등으로 비하한 데 대한 응수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서 “미 국무장관이 우리에게 대한 협담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맞받아쳤음. 대변인은 첫 머리에선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칭하였으나 후반부에선 “횡설수설하기 좋아하는 그 여자를 우리는 우습게보고 있다”고 말하거나 “소학교 녀학생”,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 등으로 낮춰 비유

- **美국무부, 北비핵화시 새 인센티브도 가능(7/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가 대북협상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잇달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 관리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이전의 보상과 함께 새로운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방송은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국무부 관리가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시작한다면 이전과는 새로운 인센티브, 즉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는 이전에 제안했던 보상도 유효하지만 여기에 다른 보상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새롭게 제공할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소개, 그러나 관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밟기 전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 **美국무부, 北, 부랑자로 남을지 결정해야(7/22, 연합)**
 - 미 국무부는 22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부랑자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설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우리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의 종식을 약속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포괄적인 유인책과 기회들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기회라는 측면에서 봐서 (북·미간) 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고 밝힘.
- **美정보국장, 사이버 공격 주체 추적 중(7/23, 연합)**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2일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의 인터넷망을 마비시킨 7월 초 사이버 공격의 주체와 관련, “아직도 추적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
 - 블레어 국장은 미 상공회의소 강연 뒤 질의응답에서 “지난 4일을 기해 감행된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북한이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직 누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언급



- **美, 北 권력승계 대비 다양한 계획 보유, (7/23, 연합)**
 -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22일에 밝힘.
 -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답변
 - 키팅 사령관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및 권력승계에 따른 미국의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김정일)가 통치권을 이양하거나 더 이상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언급

- **美상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7/23, 연합)**
 -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공식 요구
 -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 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무화됨.

- **北 화물선 담배 밀수 혐의 나포(7/22, 연합)**
 - 담배 밀수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이 키프로스 당국에 의해 나포됨
 - 키프로스 해안 순찰선은 21일 키프로스 동쪽 해상 16km 지점에서 담배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을 나포

- **美여기자석방, 北과 다양한 채널로 대화(7/21,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21일 북한이 억류 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해 뉴욕의 유엔 북한 대표부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필요할 때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왔다”면서 “북한과는 뉴욕을 포함해 대화하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고 언급

- **클린턴, ARF서 ‘北과 대화 계획없음’(7/22,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태국 푸켓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태국 방문에 앞서 인도 뭍바이에서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국제회의에 이란이 참석했으나, 나는 그들에게 얘기를 걸지 않았고 그들도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여기자 석방 매우 희망적(7/20,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에 억류중인 여기자 문제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 북·미간 물밑 접촉이 모종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

다. 북·일 관계

● **北, 日총리 가문 ‘과거범죄’ 보고서 발표(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2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조상이 세운 아소 탄광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한국인을 연행해 강제노동에 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소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죄·배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협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아소 가문이 조선에서 다량의 목재와 금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약탈해 갔을 뿐 아니라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공모하여 1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고 혹사”시켰다며 그 실태를 자세하게 밝힘.

라. 기타외교 관계

● **北, 에티오피아에 의료진 파견(7/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교육을 위해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진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 RFA는 에티오피아 보건국의 공보 관계자를 인용, 총 32명의 의료진 가운데 27명이 지난 21일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오로미아, 티그레이 등 각 지역의 병원에 배치돼 환자를 돌보고 에티오피아 의료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힘.
- 북한의 의료진 파견은 양국이 맺은 의료 협력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북한 의료진은 앞으로 2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물면서 보건 의료 분야를 지원, 또 조만간 5명의 북한 의료진이 추가로 에티오피아에 도착할 예정
- 하지만, 의약품이나 기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고 ‘오직 북한의 의료 인력만 지원받게 된다’고 에티오피아 보건국 관계자는 소개

● **주북 이집트대사 연회 개최(7/24, 조선중앙통신)**

- 이집트 혁명 57돌에 즈음해 이스마일 압둘라흐만 고네임 후세인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23일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연회에는 조선(북한)-이집트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용진 교육상,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형준 외무성 부상, 주북 각국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되었음.

● **北, 泰에 ARF 회담 지원 요청 (7/22, 방콕 포스트)**

- 북한은 23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사일 및 핵 실험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콕 포스트가 22일 보도
-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를 대표로 한 북한 대표단은 22일 오후 태국 푸껫에 도착한 직후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을 면담, 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

3. 대남정세

● **남북, 겨레말큰사전 본격 집필 합의(9/25, 통일신보)**

-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지난달 열려 본격적인 사전 집필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통일신보가 25일 보도
- 통일신보는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준비해온 어휘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본격적인 사전 집필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양측은 앞서 지난 16, 17차 회의에서 시범 원고를 제출했다고 소개
- 사전에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수집한 어휘자료 가운데 양측이 공통으로 쓰는 것을 우선 올리고, 차이나는 것은 합의한 후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올릴 것이며, 올림말에선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정보 제공,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2년까지 사전 집필을 끝내고 2013년에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클린턴 “北 협상복귀 희망..반쪽 조치 보상못해”(7/26)

- 북한이 미국과 양자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북한의 핵협상 복귀를 희망하지만 반쪽 조치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길 여전히 희망한다”면서도 협상 복귀 자체만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까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돌아온 클린턴 장관은 중국이 대북 문제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친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지난 24일 “6자회담에는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어떤 교섭에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북미 양자대화 재개에는 관심을 표시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클린턴 장관은 이란에 대해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 추구도 성과가 없는 헛된 시도가 될 것이라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이든 위협 목적이나 권력을 위해 핵무기를 추구한다면 이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北, 북핵문제는 “철두철미 북미대결”(7/26)

- 지난 23일 태국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박근광 북한 대표단장(외무성 순회대사)은 “우리를 핵무장으로 떠민 것도 미국이고 조선반도에서의 핵대결도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6일 전했다.
-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박근광 대사는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수습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 “사태의 본질과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다고 노동신문은 말했다.
- 박 대사는 또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이번 (북미) 대결의 발단이 된 것인 만큼 반드시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하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면 이를 문제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이와 함께 유엔헌장 제1장 제2조에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평등 원칙’이 규정됐는데도 안보리는 핵실험 등을 이유로 대북 제재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유엔 헌장 자체를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하고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던 6자회담은 다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종말을 고하였다”고 주장했다.
 - 그는 ARF에 대해 “연단(ARF)이 오늘까지 의의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것은 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이라며 “국제관계에서 이 근본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평화와 안전 보장도, 발전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 “北, 미사일 엔진 등 지하서 분산 생산”(7/24)

- 북한은 탄도미사일 엔진과 첨단 부품을 평양 북부에 위치한 복수의 지하시설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다고 일본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NHK는 복수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면서 미사일 개발의 실태를 외국이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지하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엔진 부분을 수도 평양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평안북도 박천 근처의 지하시설에서, 또 탄두 부분은 박천의 북쪽에 위치한 군수공장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다고 방송은 밝혔다. 이밖에 미사일을 제어하는 전자기기의 개발은 평양 근처의 지하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中외교부장, 6자회담 재개 노력 다짐(7/24)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다짐했다. 양 외교부장은 이날 태국 푸켓에서 끝난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회의를 마친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회담 재개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 양 부장은 그러나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긴밀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 부장은 6자회담의 재개가 각 당사국에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당사국들은



장기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음. 양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북한에 6자회담을 재개 하도록 적극 설득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풀이됨.

● 클린턴 “국제사회 北제재 적극 동참에 놀라”(7/24)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놀랐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 역시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될 가능성, 또 북한의 핵보유가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군비경쟁이 시작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불안해 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자신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이란 핵 문제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아직 이란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대선 이후 정정 불안을 겪고 있는 이란은 미국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아직 이란으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분명히 이란에 손을 내밀었고, 이란 대선 때 집권층이 저지른 행위를 규탄하는 것과 별개로 아직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현재 이란은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어 이란 내부의 혼란이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 정부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미국은 이란에 무한정 기회를 줄 생각은 없다고 경고했음.

● 北 ‘포괄적 패키지’론에 일단 부정적 반응(7/23)

- 미국이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 발언을 계기로 대북 ‘포괄적 패키지’론을 띄우는 데 대해 침묵하던 북한이 23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음.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식 논평과 노동신문 논설, 그리고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홍식 외무성 군축국장의 발언을 통해서임.
- 리홍식 국장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패키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패키지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음. 그는 “미국과의 대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하지만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를 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 본성



과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목의 비교적 긴 논설을 게재한 것도 포괄적 패키지를 앞세운 미국의 응수 타진에 대한 간접 반응으로 보임. 논설은 현재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 이행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 전략은 “반제자주적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켜 저들의(자신들의) 지배권안에 넣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라고 규정하고 “제국주의의 본성의 불변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을 강력 경계했음.

- 신문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평화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저들(자신들)을 평화옹호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승냥이는 언제까지나 승냥이로 남아있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선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린턴 “北 잇박자 유감..단호히 제재”(7/23)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국을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이날 태국 푸껫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ARF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잇박자를 내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북한이 과거 국제회담에서 강경발언을 하면 지원이 주어지곤 했는데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은 오늘날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이 이날 비핵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과거에 했던 것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절반의 조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그는 ‘비가역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제공할 이른바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미국이 마련한 포괄적 패키지에는 전면적인 관계정상화 외에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에너지 및 경제지원이 모두 담겨있다”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이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협의해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비가역적 조치의 기준’으로 2005년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우리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거절로 잘못된 길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과 국제사회의 골치거리”라고 비난했음.



● “北, 미얀마 핵기술 수출경로로 활용할 수도”(7/23)

- 북한과 미얀마 간 핵 협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얀마가 북한의 핵기술 수출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세계경제연구소 알렉산드르 피카예프 군축 분과장은 22일(현지시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두 나라 핵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얀마를 일부 핵무기의 비축 기지나 핵기술을 제3국으로 넘기는 데 있어 중간 경유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그러나 그는 “북한이 미얀마에 핵 분야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은 (핵개발에서) 매우 초기 단계로 위협 요소는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북한과 미얀마의 핵 협력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미얀마 간 핵 협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얀마 지도부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본받아 고립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음.

● 北외무성, 클린턴에 “그 여자” “소학교 녀학생”(7/23)

- 북한 외무성이 23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그 여자”라고 부르고 “때로는 소학교 녀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마당에나 다니는 부양을 받아야 할 할머니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험담했음. 클린턴 장관이 최근 북한을 “관심 끌려고 보채는 꼬마이자 철부지 10대” 등으로 비하한 데 대한 응수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미 국무장관이 우리에게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맞받아쳤음.
- 대변인은 클린턴 장관이 “취임 벽두부터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에게 대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속된 발언들을 연발하고 있는데 허튼말이 너무 많다”고 말해 클린턴 장관의 북한 권력승계 발언 등에 ‘포괄적으로’ 반발했음. 특히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관심을 끌려는 꼬마의 행동에 비유한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그 누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음.
- 대변인은 “그(클린턴)의 말만 들어봐선 전혀 지능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조롱하고, 클린턴 장관이 국제사회의 “중앙무대에 서려는 만족감을 북한에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일 앞장에 서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공연한 소동을 피워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 덕분에 중심무대에 서게 됐다”고 비꼬기도 했음.



● 클린턴, 아세안에 북핵제재 적극이행 촉구(7/2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참석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안보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또 국제사회는 금지 화물을 적재한 북한 선박이 자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제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한다면 외교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다른 인센티브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미국의 협상 파트너들이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관계 정상화와 대폭적인 에너지·경제 지원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음.

● 靑 “5자협약, 北제재이후 대화대비”(7/23)

-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3일 “대북 제재국면은 계속되지만 제재상황이 끝난 뒤의 국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을 제외한 5자 협약은 제재국면이 끝난 뒤를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말함.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청 강연에서 “대북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이 핵을 버리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이같이 밝힘.
- 그는 “5자 협약이 북한을 제재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이 더는 곤란하다고 해서 회담에 나오겠다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협의”라고 설명함. 김 수석은 이어 “제재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5개국 모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함.
- 그는 “우리는 물론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관련국을 방문하고 지금 푸켓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관련국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모두 5자 협약에 해당한다”고 밝힘. 김 수석은 이어 “지난달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재가 끝난 뒤 뭘 할 것인지, (북한이) 이만큼 하면 (국제사회가) 이만큼 도와주고 그러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건 곤란하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면 원하는 것을 주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고, 오바마 대



통령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소개함.

- 그는 “(두 정상은) 다만 지금은 제재 국면이니 그 기간에 5개국이 포괄적 제안에 뭘 답을 것인지 협의해 제재국면이 끝나면 협의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함. 김 수석은 이어 “지구상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완전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정치적 대화를 하고 한국과는 경제적 대화를 통해 경제적 이득만 취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함.
- 그는 “결국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한국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고 6자회담도 남북한이 주가 되는 ‘2+4’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며 북한이 6자회담을 안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다만 김 수석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당분간은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 당시 불편했던 여러 나라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도 일종의 손을 내민 것이라고 미 당국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측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내민 손을 뿌리치고 손등을 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함. 김 수석은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부터 취해온 화해 제스처에도 손등을 맞은 꼴이 돼 과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확고히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함.
- 그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당시 러시아의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 북한이 동의하면 북한을 통한 가스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협의가 됐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비용이 덜 들고 북한도 개방에 신경쓰지 않고 땅만 빌려주고 돈을 받기 때문에 응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이 문제는 안보상황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 “日·中, 북핵 묵인 못해” <日외무상>(7/22)

- 일본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무상이 22일 말함. 나카소네 외무상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 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태국 푸켓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나카소네 외무상의 대변인이 밝힘.
- 대변인은 일본과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을 묵인할 수 없다 강조함. 대변인은 또 두 장관이 대화의 문을 열어 놔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은 물론 북한에도 6자회담과 협상의



문을 열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함. 그는 양측이 대북 제재를 위해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효과적이고 단호한 이행을 확고히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 400억달러 對北 원조기금 방안 마련” <FT>(7/21)

-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00억달러 규모의 대(對)북한 원조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마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1일 서울발로 보도함. 한국 정부 관리들은 북한에 당근책으로 제시될 이 기금이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과 각국 정부의 투자로 조성될 것이라고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에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 기금으로 북한에 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연 생산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함. 국제사회는 또 북한에 철도, 도로, 통신망을 건설하고, 30만명의 산업인력을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산림녹화사업도 실시됨.
-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 보장과 외교관계 복원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골드만 삭스에 말함.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지원이 출발점이 될 것이며,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개국과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함. 한편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8일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 측의 400억달러 원조 기금 방안에 미국이 합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골드만 삭스에 북한 문제를 브리핑한 위 본부장과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적대적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있으며, 회담장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다고 말해 한반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애썼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함. 북한이 미안마로 무기를 신고 간다는 의혹을 산 배를 회항시킨 것은 고무적이며, 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과 임대료 논의에서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정부 관리들은 말함.

● 아세안 “北, 6자회담 복귀해야”(7/20)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들은 최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20일 밝힘.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앞서 이날 태국 푸켓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함.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력 비난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한다”고 천명함. 또 “6자회담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회



답에 복귀하고 이전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미·북 관계

● “여기자 평양체류때 문제해결해야”(7/26)

-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조지아대(UGA) 박한식 교수는 26일 북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문제와 관련, “두 여기자가 평양에 머물고 있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조지아주 최대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 터튜션(ajc)’과의 인터뷰에서 “두 여기자가 계속 평양에 머물고 있 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는 마치 시간이 촉박한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로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 박 교수는 지난달 8일 적대행위 및 불법입경 등의 죄목으로 노동교 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로라 링 씨와 유나 리 씨가 현재 평양의 한 초대소에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 음. 그는 “북한 관리들도 이들이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점을 알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불필요하게 나쁜 감정을 갖거나 석방 후 중상 을 하지 않도록 가급적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음.
-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은 미국 정부나 ‘커런트 TV’가 여기자들이 북 한에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사과를 하면 여기자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라고 말했다.
- 신문은 박 교수가 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 및 미국 관리들의 북한 방문 전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최근 방북에서 는 북한 관리들과 두 여기자의 석방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함에 따라 CNN, ABC 등 주요 언론이 북한 문제가 현안이 될 때마다 분석가로 찾고 있다고 보도했음.
- 특히 두 여기자의 석방문제와 관련한 역할에 대해 박 교수는 “아무 런 공식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없다”면서도 “여기자 문제와 관련해 커런트 TV를 포함해 미국과 북한 정부간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돕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美에 직접 대화 타진”<산케이>(7/26)

-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미국과 대립해온 북한이 뉴욕 유 엔대표부를 창구로 하는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에 직접 대 화를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음.
- 북한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등 포위망 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압력을 피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



자들을 인용, 전했다.

-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내에서는 북한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안이하게 대가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신문은 밝혔다.
- 신문은 또 다른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 “과거에 압력을 피하는데 성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구속돼 있는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문제가 있어 미국측이 응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 클린턴 “북한 인권침해 해결 노력”(7/25)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클린턴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푸껫에서 지난 2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싸움은 북한 주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마저 거부하는 북한 지도부와와의 싸움”이라면서 “북핵 핵프로그램의 종식을 위해 일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안녕과 존엄, 인권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국무부가 전한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또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중인 NGO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어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대북 인권특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또 이날 회견에서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조만간 아시아로 다시 보낼 방침임을 밝혔다. 또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 참석하는 다이빙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도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은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매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버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 북한으로 회항한 강남1호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 美합참의장 “대북 압력 계속될 것”(7/25)

-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4일 북한이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핵무기 없는 북



한을 만드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목표”라면서 “그런 (북한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고, 또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을 좀 더 지지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 등도 동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최근 행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들도 이같이 강력한 결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방어망의 일환으로 알래스카에 배치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등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괜찮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위협과 같은 어떤 것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을 그곳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한,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 재개”(7/24)

- 북한이 질병을 앓고있는 김정일의 후계 옹립을 위한 미묘하고도 일관된 선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고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가 분석했음.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8년 전 처음 시작한 김정일 후계 준비 작업을 지난해 재개했으며 이제 그 작업의 초점이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26)에게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가 올해 5월 6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후계자 옹립 작업의 본격화가 2012년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최근의 신호들은 몹시 미묘해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북한) 내부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래의 후계 구도와 관련한 미묘한 신호의 하나로 지난 2월 김정일의 67회 생일 관련 북한 언론 보도를 예로 들었음.
- 보고서는 당시 보도가 “평소보다 더 나아가 혈통에 입각한 김정일 가계의 지속적인 통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고 분석했음. 보고서는 또 지난 2월 북한의 한 TV방송 보도에서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막내가 사회주의 원칙에 투철하다고 강조”하는 등 김정운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北 ‘김정운 후계’는 ‘사상적 순수성’ 감안”(7/24)

-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오픈소스센터’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을 낙점한 것은 그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사상적 순수성(ideological purity)’을 내세울 수 있는 점을 적극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했다.
- 오픈소스센터는 최근 작성한 북한의 권력승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김정운이 형들과 달리 외국 언론에 보도되거나 등장한 적이 없다”며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오히려 후계자로 선택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또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겪은 것이 후계자 지명 일정을 앞당겼을 수 있지만 실제 김 위원장은 “2001년 이래 계속 권력승계를 계획하고 준비해왔다”며, 그 근거로 2001년 7월부터 북한 매체에 “김일성의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선전문구가 등장한 것을 들었음. 보고서는 이어 2002년 1월 김정일의 친모 고영희씨를 우상화하려는 문구가 등장하고 같은 해 10월 “손자”라는 표현도 나타나기 시작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고영희 아들중 한명이란 사실이 점차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3대 세습을 위한 선전작업은 2004년 8월 고영희씨의 사망을 계기로 휴지기에 들어가 지난해 말까지 계속돼다가 지난해 중반 쓰러졌던 김 위원장의 복귀와 함께 지난해 11월 이후 정운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음. 그러나 정통한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에서 고영희씨의 아들중 한명을 후계자로 내세우려던 움직임이 일다가 중단됐던 것은 맞지만,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고영희씨가 1998년께 군부 측근들과 손잡고 자신의 아들중 한명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다가 김 위원장의 제지로 중단됐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되살아난 CVID.. 북·미 관계 험로 예상>(7/23)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중인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면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대목이 현지 외교가의 시선을 잡고 있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내포돼 있음. 과거 북핵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워싱턴의 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이 담겨 있다며 극도로 꺼렸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연상시키기 때문임.
- 북한은 6자회담에서 CVID라는 말이 거론될 때마다 자신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키고 경제적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옴. 특히 CVID는 패전국에만 강요하는 주장으로, 평화적인 핵계획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굴욕적인 것이라며 이 용어 사용을 말아줄 것을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공식 요청하기도 함.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과 함께 CVID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상징하는 말로 인식됨.
- 결국 북한과의 협상을 선택한 부시 정부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첫 참가한 2005년 7월의 4차 6자회담에서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음.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음. 결국 2005년 9월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설계도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



됨. 이런 역사성 때문인지 클린턴 장관이 사실상 CVID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기준이 그만큼 강경해진 것이 아니냐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이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6자회담의 성과와는 거리가 먼 핵보유국으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풀이됨. 결국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 경우 분명한 비핵화의 길을 걸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오바마 정부는 명백히 하고 있는 셈임.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이 22일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은 마음을 결정해야 하며 계속 국제사회의 부랑아(outcast)로 남길 원하는지, 또는 국제사회가 제안한 길을 걷길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하지만 북한이 새롭게 등장한 CVID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력 반발할 경우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음. 이는 곧 현재의 대결국면을 더욱 가열시켜 당분간 북·미 관계, 나아가 전체 6자회담 국면의 경색이 더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런 까닭에 외교전문가들은 특정한 용어에 구애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말의 성찬’인 외교무대의 특성상 특정한 어감을 갖는 용어가 등장하느냐, 마느냐는 협상 상대를 배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임. 하지만 이미 북한과의 협상 기준으로 사실상의 CVID를 택한 오바마 정부가 쉽게 융통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결국 서로에게 ‘먼저 태도를 바꾸라’는 북·미간 팽팽한 신경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美상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요구(7/23)

- 미국 상원은 22일 북한이 인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버락 오바마 정부에 공식 요구함. 상원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찬성 66표, 반대 31표로 가결함. 법안은 북한이 지난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뒤 그동안 보여온 행동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무화함.
- 법안은 또 북한이 테러나 테러조직에 대해 지원을 한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북한의 확산 기록을 조사해 보고서에 담는 한편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 경우의 효과도 함께 평가토록 함. 이와 함께 북한을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하도록 함. 앞서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 후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주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으로 다시 지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음.

-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단정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브라운백 의원의 법안에 대한 수정 성격을 갖고 있음. 이 법안 발의에는 케리 외교위원장 외에 위교위 산하 짐 웹브 동아태 위원장과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올해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부속 법안으로 통과됨. 케리 외교위원장은 전날 상원에서 이뤄진 관련 토론에서 현 상태에서 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한편 브라운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54표 부결됨.

◎ 미국무부 “北, 불량자로 남을지 결정해야”(7/23)

- 미국 국무부는 22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불량자로 계속 남을지 아니면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설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조치 착수를 촉구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당연히 취했어야 할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 우리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의 종식을 약속하고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포괄적인 유인책과 기회들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기회라는 측면에서 봐서 (북·미간) 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고 밝힘.
- 앞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태국 푸껫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괄적 패키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동의하면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이에 대해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과의 향후 대화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져야만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 비핵화조치) 다음 차례로 우리와 파트너들이 포괄적 방법으로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함. 그는 “북한은 마음을 결정해야 하며, 계속 국제사회의 불량자(outcast)로 남길 원하는지, 또는 국제사회가 제안한 길을 걷길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어떤 길을 걷길 원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량자와 버림받은자(pariah)로 남게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일일 것”이라고 밝힘.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묻는 질문에 “먼저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보인 행동



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함.

- 이 밖에 그는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미간 양자접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힘. 아울러 북한과 미얀마간의 군사협력을 우려한 클린턴 장관의 언급과 관련, “군사 협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장관은 매우 명확히 우리의 우려를 밝혔”고 말함.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군사협력이 이뤄지는데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함.

● 美 “北 권력승계 대비 다양한 계획 보유”(7/23)

-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힘.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함.
- 키팅 사령관은 김정일 건강이상설 및 권력승계에 따른 미국의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김정일)가 통치권을 이양하거나 더 이상 통치를 할 능력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 이같이 답함. 미군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권력승계 불확실성에 대비한 미군의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임. 그는 “김정일이 (권력을) 떠나는 것이 미국의 안보위기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구체적인 김정일 건강상태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면 “그가 건강의 변화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겉보기에는 신체적으로 1년 전에 비해 요즘 다른 것 같다”고 평가함. 그는 이어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들 및 동맹국 등과 긴밀한 협의 속에 연구중인 여러 옵션들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국무부 등과의 협조 속에 광범위한 옵션들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그는 “김정일의 지위 변화가 군사적 대비태세의 변화를 불러올 것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군사적 대비태세의 가능한 변화에 대해 계획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지적함. 그는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는 일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되는 과정이라면서 “북한의 상황을 항상 주의깊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대북 옵션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키팅 사령관은 또 최근 미국 내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북한과 미얀마 간의 핵기술 이전문제와 관련, “과도하지 않은 수준(moderately)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버마(미얀마)가 북한의 상품이나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함.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버마를 포함한 일부 나라들과 북한간의 해·공로를 통한 이동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이와 함께 그는 북한으로 돌아간 강남1호 외에 다른 수상한 북한 선박을 미군이 추적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뒤 “우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선박도 추적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함. 그는 미얀마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됐던 강남1호에 실린 화물의 내용과 갑작스런 북한 회항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어떤 지시도 실행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전함.

● “美, 北미사일 요격실패 부담 지려 않을 것”(7/22)

- 그레그 털먼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전략무기 확산담당 국장은 21일 미국의 주도로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가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털먼 전 국장은 이날 군축협회(ACA)의 MD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은 M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열의는 더 강해졌다”며 “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미사일 개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MD가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협을 더 늘리는 측면도 있다”며 그 사례로 대만의 경우 “1990년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도입했지만 중국이 당시 수백기에 불과하던 대만 공격용 미사일을 지금은 수천기로 늘려 배치해둔 상태”여서 “위협이 더 커졌다”고 지적함. 이 토론회에서 필립 코일 전 미 국방부 무기운용 시험·평가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MD를 이용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요격 시도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며 “요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예상함.
- 코일 전 차관보는 “요격 시험과 비교해 상황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실제 요격을 강행함으로써 실패할 위험을 무릅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만약 요격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코미디 쇼 진행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지 않을까요”라고 말함. MD 전문가인 스티븐 힐드레드 미



국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보다는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추려 노력 중”이라고 분석함.

- 그는 북한이 지난 11년간 3차례 ICBM 시험 발사를 해 모두 실패한 점을 지적, “발사 때마다 수집된 정보를 다음 발사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듯 하지도 않다”며 “일부에서는 북한이 단지 남한보다 먼저 위성 보유국이 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음.

● “美, 포괄패키지 동맹승인없이 제시안해”(7/22)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를 전인해내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포괄적 패키지’는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으며, 동맹국들의 승인이 없는 한 북한에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이 말함. 21일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태국방문을 수행중인 이들 관리는 미 행정부가 포괄적 패키지를 동맹국과 협의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힘.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중시하는 이유는 조지 부시 전임 정부 시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일본 등의 반발을 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 미국이 이런 패키지 제안을 하기에 앞서 북한은 먼저 핵무기 폐기 착수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관리들은 지적함.
- 이들은 “(과거처럼) 북한이 미래에 행동을 취하겠다는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의 확실한 행동을 봐야만 한다”고 밝힘. 미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불가역적’ 조치에 뒤따를 사항을 북한측에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관리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에서 포괄적 패키지는 2차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며, 당장 1차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의거해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조, 이를 강력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함.
- 이들은 “이 문제가 2주일 정도에 끝날 일은 아니다”면서 투트랙 전략 이행에는 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 이들 관리는 포괄적 패키지에는 6자회담에서 제기됐던 ‘친숙한’ 요소도 있지만 새롭고도 ‘차원’이 다른 요소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클린턴 “ARF서 北과 대화 계획없다”(7/2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에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이날 태국 방문에 앞서 인도 뭍바이에서 미 폭스뉴



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국제회의에 이란이 참석했으나, 나는 그들에게 얘기를 걸지 않았고 그들도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북한 대표와 같은 회의실에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과 얘기할 의도가 없다”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함. 이어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현재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입장선회가 전제돼야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북한과 파키스탄간 핵협력 커넥션과 관련, 클린턴 장관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중대한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당국에도 이 문제를 얘기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함. 클린턴 장관은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미국적 여기자 문제에 언급, “북한이 사면을 통해 그들을 조속히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길 바란다”며 “만약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중요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함.

● “美여기자들, 의료보호시설에 수용돼”(7/21)

-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 2명은 현재 ‘호화 호텔’이 아니라 ‘의료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기자의 남편인 마이클 샬데이트씨가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함. 샬데이트씨는 19일 시카고에서 열린 석방추구 촛불집회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두 여기자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함. 조지아주립대학의 박한식 교수는 최근 평양을 방문한 뒤 미국 여기자들이 평양의 한 초대소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었음.

● 클린턴 “여기자 석방 매우 희망적”(7/2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에 억류중인 여기자 문제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언급, 북·미간 물밑 접촉이 모종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함. ABC방송 인터넷판은 이날 인도를 방문중인 클린턴 장관이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여기자 석방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매우 희망적(I’m very hopeful)”이라면서 “국무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희망적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또 클린턴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0일 유감(sorry)을 표시하면서 북한 당국의 사면을 촉구한 것과 관련, 북한으로부터 사과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항상 요구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미국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표명, 법체계 인정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은 전직 대통령의 특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미간에는 그동안 기대가 몇번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신중히 전망하면서 “북·미간에 뉴욕채널 등을 통해 얘기가 계속 오가고는 있으며,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함. ABC방송은 클린턴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들 젊은 여성이 어찌면 (국경을) 침입했을 수도 있음을 시인했고, 그래서 이들도 깊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일의 발생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ABC방송은 인터넷판에만 이 같은 인터뷰 언급을 실은 채 실제 방송된 클린턴 장관의 인터뷰 화면에서는 해당 부분의 언급을 방영하지는 않았음. 앞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아침 방영된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유감’ 표명이 사과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젊은 여성들 스스로가 말한 것의 인정”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들 젊은 여성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솔직히 말해 그것(북한의 군사력)은 대수롭지 않다(not all that great)”고 평가함. 그는 이어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 “그들(동맹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긴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함.
-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위협을 관심을 끌려는 어린 아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10대들의 행동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그는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중앙무대에 다시 서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만족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함. 또 “우리가 본 것은 끊임없는 관심 요구”라면서 “이는 마치 관심을 요구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제멋대로 하는 10대 등에서 느꼈던 경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함.

다. 일·북 관계

● 北, 日총리 가문 ‘과거범죄’ 보고서 발표(7/25)

- 북한의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는 25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의 조상이 세운 아소 탄광이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한국인을 연행해 강제노동에 동원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소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죄·배상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협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아소 가문이 조선에서 다량의 목재와 금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약탈해 갔을 뿐 아니라 일제의 조선총독부와 공모하여 1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고 혹사”시켰다며 그 실태를 자세하게 밝혔다. 보고서는 아소 총리의 증조부인 아소 다키치가 창업한 아소그룹이 1927년에 일제 조선총독부로부터 산림 6천여 정보를 사들인 뒤 8천여 명의 주민을 노무자로 고용했고 1930년대에는 김화군의 금광산(269만8천평)과 안변군의 보성금광산(294만5천평)을 헐값에 사 노무자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1939년 가을부터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까지 일본의 탄광들에 끌려간 한국인은 5만8천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아소 탄광이 집중된 후쿠오카현 지역에 강제연행된 한국인은 2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 보고서는 “아소 탄광에서는 조선에서 끌려간 청장년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였다”며 “지난날 아소 가문이 탄광뿐 아니라 시멘트와 철도, 전력 등의 기업들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아소 그룹의 공장, 기업소들에 강제연행된 조선 사람들의 수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선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은 구 일본 정부와 군부가 모든 권한을 총발동하여 감행한 범죄”인데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인정도 청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아소 총리가 “이러한 책동에 앞장서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 보고서는 아소 총리를 겨냥, “자기 가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단독제재 결정과 선제공격 발언 등을 비난했다.
- 이어 보고서는 “아소와 일본의 정부, 기업들은 마땅히 과거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조사공개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철저히 사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北 김정운 칭송가 주민에 보급” <아사히> (7/24)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정운씨를 칭송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래가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불리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4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북일우호협회 소속 회원들은 방북 기간 여러차례 이를 직접 들었다. ‘발걸음’이라는 노래는 “우리 김대장의 발걸음, 힘차게 한번 내딛으면 전국의 산하가 반기네”라는 등 김 대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단체 방북단에 따르면 황해북도의 농장에서는 회의실에 가사가



걸려있고, 책임자인 한 여성이 이 노래를 불렀음. 평양 교외의 제강 소에서는 건물 보수를 하고 있던 노동자 10여명이, 평양의 음식점에서는 점원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임. “김대장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정은 대장 동지”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방문단의 일원이었던 모리 요시노부(森善宜) 사가(佐賀)대 준교수(국제정치)는 “이 노래는 3대째의 후계자 선출을 위한 분위기 만들기”라고 관측했음. 그러나 북한측 북일우호친선협회 회장인 김태종 조선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은 후계 문제와 관련, “정식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 단체에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최근 전한 바 있음.

● “北, 총탄 한발 바치기 운동” <요미우리>(7/23)

- 북한이 이달들어 미국 등과의 ‘사투’를 강조하면서 ‘한 사람이 총탄 한발을 바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 국민에 철제품 등을 헌납하라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북중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3일 보도했음.
- 신문은 이 운동이 김일성 사망 15년이 되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됐으며, “모두가 육탄이 돼서 미국을 필두로 하는 모든 반동파와의 사투를 결의하자!”라며 “10명이 대포 한 발!, 1천명이 미사일 한 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신문은 “북한 주민은 즉시 철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가락을 바치는 초등학교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총탄 몇 발을 바쳤느냐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日, 핵 관련 北기업 자산 동결(7/23)

- 일본 정부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라 북한의 핵 관련 기업 등 5개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북한 고위 관리 등 5명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금지 대상자는 리제선 북한 원자력 총국장 등으로, 일본 정부는 이들의 일본 입국 및 일본 경유 제3국행을 금지하게 됨.
- 자산 동결은 핵 관련 기업인 남천강무역 등이 대상.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자산이 일본 내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라. 기타

● <北 평양에 패스트푸드점 첫 등장>(7/25)

- 북한의 평양 금성네거리에 지난달 초 ‘속성음식 센터’(패스트푸드점)인 삼태성청량음료점이 문을 열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전했다.
- 평양 모란봉구역 긴마을 2동, 4.25문화회관과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는 건물 2층에서 영업 중인 이 가게는 “새것에 민감한 시민



들 속에서 화제를 모으는 속성음식 센터”라고 신문은 소개했음. 신문은 이 가게의 “협조대상”이 “워홀(와플) 판매점을 운영하는 싱가포르의 기업”이라고 밝히면서도 ‘싱가포르측은 설비만 제공하고 노력과 음식의 원자재는 모두 조선(북)측에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식 패스트푸드점인 점을 강조했다. 종업원들은 개업에 앞서 싱가포르측이 파견한 담당자로부터 “요리기술과 봉사방법에 관한 견습”을 받았지만 “요리의 맛”은 품평회를 거듭해 북한 주민의 구미에 맞게 다시 개발했음.

- 신문은 이 가게가 “언뜻 보기에는 차림표나 음식점의 내부장식 등이 다른 나라들에 있는 햄버거 전문점의 인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평양 주재 외국 특파원들의 소개 기사를 근거로 “일부 언론들은 마차나 조선에 맥도날드와 같은 서양식 식생활 문화가 유입된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삼태성청량음료점의 지향은 남들의 모방이 아니라 조선식 속성음식 센터로서의 발전”이라며 “현지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가게의 차림표는 햄버거 대신 ‘다진 소고기와 빵’, 와플 대신 ‘구운빵지집’이라는 표현을 씀.
- 다른 메뉴는 100% 광어로 만든 ‘다진 물고기와 빵’, 지방이 많은 음식을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남새(채소)와 빵’이 있으며 ‘다진 소고기와 빵+감자죽+김치’로 된 ‘정식’ 메뉴도 있음. 음료는 “각종 탄산물과 ‘금강생맥주’를 제공함.

● “北 신종플루 발생보고 아직 없어”<WHO>(7/25)

-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북한에서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신종 플루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 지역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 WHO의 아파루크 바티아세비 공보담당관은 이날 RFA와 회견에서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플루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WHO의 193개 회원국 가운데 160개가 넘는 나라에서 감염자가 발생했고 감염자 수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북한 주민들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WHO는 북한에서 신종 플루가 발병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5월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했으며 북한처럼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치료약의 비축량이 부족하거나 치료약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타미플루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北, 에티오피아에 의료진 파견” <RFA> (7/25)

- 북한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의료 지원과 교육을 위해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진을 처음으로 파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했다. RFA는 에티오피아 보건국의 공보 관계자를 인용, 총 32명의 의료진 가운데 27명이 지난 21일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으며 이들은 오로미야, 티그레이 등 각 지역의 병원에 배치돼 환자를 돌보고 에티오피아 의료진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 북한의 의료진 파견은 양국이 맺은 의료 협력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북한 의료진은 앞으로 2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물면서 보건 의료 분야를 지원하게 됨. 또 조만간 5명의 북한 의료진이 추가로 에티오피아에 도착할 예정. 하지만, 의약품이나 기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고 오직 북한의 의료 인력만 지원받게 된다고 에티오피아 보건국 관계자는 말했다.
-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1975년 수교한 뒤 ‘20년 친선협조조약’(1983), ‘경제기술협조협정’(1985), ‘탱크생산재개협정’(2004) 등을 체결했으며 2007년에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친선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히 교류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北 호화요트 사건 수사(7/25)

- 오스트리아 검찰은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화요트 구매 사건과 관련,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인 1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대변인은 “오스트리아인 1명과 북한 국적자로 보이는 한국인 1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는 오스트리아인을 중개인으로 삼아 이탈리아에서 호화요트와 자동차를 주문한 것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 앞서 이탈리아 경찰은 오스트리아 용의자가 주문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중국기업에 매각된 호화요트 2척을 압수했음. 북한에 사치품을 파는 것은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의 대북 무역제재 조치에 위배되는 행위.
- 이와 관련,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경찰 소식통을 인용, 이들 요트의 가격이 1천300만유로(한화 234억원)에 달하며 산업 스파이 활동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음.

● <애틀랜타서 북한 미술 전시회> (7/24)

- 북한 미술 전시회가 애틀랜타에서 열리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음. 지난 17일부터 애틀랜타 다운타운 그래니트 룸에서 개막된 북한 미술 전시회에는 풍경과 동물, 꽃 등을 주제로 한 북한화가 14명의 작품 24점이 전시되고 있음.
- 전시 작품에는 백두산(리해룡), 구월산의 봄(박성실), 호랑이(박차남), 장미(김기민), 새우(김기만), 산악의 수리개(정창모), 보동강반에서(김성호), 내 고향으로 가는 길(김춘진), 묘향산 주구봉의 아침(조병주-



김금성), 금강산 칠구봉의 아침(선우영) 등이 포함돼 있음. 특히 북한에서 나름대로 예술적 재능이 확인된 인사들에 부여하는 공훈예술가 3명과 공훈예술가중에서 도 특출한 예술적 성과를 거둔 작가에게 붙여지는 인민예술가 5명의 작품도 포함돼 있음. 작품들은 1995년 이후 완성된 최신작들로 한지를 이용해 그린 동양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전시회가 성사되기까지는 중국 상하이의 미디어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활동중인 미국인 마이클 브레이밴드씨의 노력이 담겨있음. 전시작품들도 모두 그가 3년간 북한을 방문해 수집한 작품들임.

● “北, 미얀마 핵기술 수출경로로 활용할 수도”(7/23)

- 북한과 미얀마 간 핵 협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얀마가 북한의 핵기술 수출 경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관계·세계경제연구소 알렉산드르 피카예프 군축 분과장은 22일(현지시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두 나라 핵 협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미얀마를 일부 핵무기의 비축 기지나 핵기술을 제3국으로 넘기는 데 있어 중간 경유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그러나 그는 “북한이 미얀마에 핵 분야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은 (핵개발에서) 매우 초기 단계로 위협 요소는 되지 않는다”며 “미국이 북한과 미얀마의 핵 협력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음.

● 北화물선 담배 밀수 혐의 나포(7/23)

- 담배 밀수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이 키프로스 당국에 의해 나포됨. 키프로스 해안 순찰선은 21일 키프로스 동쪽 해상 16km 지점에서 담배 밀수선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화물선을 나포함. 이집트로 향하던 이 화물선에는 100만갑 가량의 담배가 실려 있었으며 키프로스 세관 담당 직원은 22일 “담배의 양은 시가 99만3천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키프로스 법원은 이집트인 선장 프린스 티, 레바논 선원 1명, 시리아 선원 2명을 조사가 진행되는 8일간 억류하도록 승인함. 이 화물선은 앞서 키프로스 섬의 터키 소속 항구인 파마구스타를 출항해 이집트의 사이드 항구로 향하던 길이었음.

● “스위스, 대북 금지품목 금융서비스 금지”<VOA>(7/22)

- 스위스 연방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지난 1일 제재강화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고 대북 금지품목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스위스 연방 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는 지난 2일 발효된 시행령에서 “금융자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더 구체화해 대북 금지품목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금지했다”고 VOA는 설명함.

- 이 시행령에 따라 대북 무기 금수조치의 대상이 탱크, 공격용 헬기와 같은 중화기에서 모든 무기와 관련된 물자로 확대됐다고 VOA는 전함. 스위스 정부는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추가 제재조치에 맞춰 후속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발표한 시행령의 부속서를 개정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인물과 기업, 기관들의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을 담은 계획임.

● 北, 泰에 ARF 회담 지원 요청(7/22)

- 북한은 23일로 예정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미사일 및 핵 실험과 관련해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태국 정부가 북한 대표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신문인 방콕 포스트가 22일 보도함.
-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를 대표로 한 북한 대표단은 22일 오후 태국 푸껫에 도착한 직후 카시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을 면담, 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카시 외무장관의 비서인 차와논드는 “북한 대표단은 최근 실시한 미사일 및 핵 실험으로 인해 다른 참가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북한측의 지원 요청과 관련, 카시 외무장관은 ARF 회담에서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참가국들이 ARF 회담을 이용, 다른 나라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차와논드 비서는 말함. 카시 외무장관은 또 북한이 미국측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미국 정부도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차와논드는 덧붙였음.
- 미국은 이번 ARF 회담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파견했으며 북한은 박의춘 외무상을 파견해달라는 주최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박근광 전 나미비아 대사를 대신 파견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2012년까지 확장억지계획 완성”(7/26)

- 한국과 미국은 2012년까지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완성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지력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한·미가 2012년까지 공동으로 완성키로 했다”면서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양측이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소식통은 “미국은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역지력 구현 방안 모두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에 의해 미국의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도 ‘작전계획’ 수준에서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른 소식통은 “확장역지력 공약 구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양국 국방부가 실무팀을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은 이번 SPI 회의에서 확장역지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 이에 대해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제23차 SPI 회의를 통해 지난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역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장역지 개념은 2006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그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됐음.
-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이 개념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3대 타격수단으로 응징한다는 것임. 미국은 이에 더해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역제 수단으로 이들 3대 전략무기에다 미사일방어(MD)와 초정밀타격 체제를 더했음.

● 한·미, 내달 17~27일 UFG 연습(7/24)

-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다음달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4일 밝혔다.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 훈련인 UFG 연습은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 연습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활용됨. 올해 UFG 연습에는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지휘부 등 5만6천여 명의 한국군과 해외 미군과 주한미군 1만여 명 등이 참가함.
- 특히 이번 UFG 연습에는 기존 연합방위체제의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신한 새로운 공동작전계획(공동작계)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는 이번 UFG 연습부터 새 작계를 적용하는 데 이어 2012년 봄까지 연합연습을 통해 공동작계를 최종 점검한 뒤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일정으로 이행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북한 측에 UFG 연습은 방어준비태세 연습이며 어떠한 면에서도 도발행위는 아니라고 통보했음.

● 한·미, SPI서 정상회담 후속대책 협의(7/23)

- 한국과 미국은 23일 서울에서 제23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분야 후속 발전방안을 협



의함.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SPI 회의에는 김상기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함. 김 정책실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SPI 회의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라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그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의함.

-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력 공약 구현과 미국의 보완전력 지원 방안,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전해짐. 특히 양측은 확장억지력 구현방안이 SPI 회의를 통해 가시화되면 이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것으로 보임. 이 방안이 SCM에 보고되면 양국은 이에 대한 전략지침을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에게 각각 하달할 것으로 전망됨.
- 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와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 정부 보증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한·미는 용산기지를 2014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키로 하고 이전비용은 한측이 4조2천억원~4조8천억원(사업지원비 3조원 별도), 미측은 6조8천억원 가량을 부담키로 개략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 다만, 평택에 건설될 미군 가족 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정부보증’ 문제로 협상을 최종 타결 짓지 못하고 있음.
- 국방부는 이와 관련,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15~45년 사이에 미군이 철수할 경우 국방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HHOP 컨소시엄인 ‘험프리 패밀리 커뮤니티’(HFC) 측에 미군 철수 후 임대사업을 허가해주는 방안 등을 미군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국방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등은 법률적 검토와 관련부처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SPI 회의에서도 그간 검토해온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미 “포괄적 해결방안 계속 협의”(7/22)

-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푸껫 웨라톤호텔에서 만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전함. 문 대변인은 “양국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을 비롯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특히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결의 이행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함.
- 양국 장관은 특히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와 미국인 여기자 2명의 문제와 관련,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



이함. 정부 당국자는 “유 장관이 유씨 역류 문제를 언급하고 미국 여기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기자 역류문제는 북핵 이슈와 분리돼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함. 클린턴 장관은 여기자 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안전하고도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고 말함.

- 양국 장관은 이어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의 협력,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환경 문제 등 동맹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장관급 전략대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함. 한편,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연쇄적으로 양자회담 등을 갖고 사실상 5자 협의를 진행함.
- 현지 외교소식통은 “당초 5자 협의는 특정한 회담 형태를 지향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향후 협상 복귀를 염두에 둔 5개국간 긴밀한 협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날 연쇄협의를 5자간 협의라고 보면 된다”고 말함. 클린턴 장관은 이날 러시아-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양자협의를 진행한 뒤 ARF 개최국 태국과도 양자협의함. 유 장관은 클린턴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잇달아 만나 양자 현안뿐만 아니라 북핵 및 국제사회의 대응,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함.

● 캠벨 “포괄적 패키지, 한·중·일과 조율”(7/21)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일 “(북한에 대한) 포괄적 패키지는 미국 단독이 아닌 한·중·일과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함. 방한 중인 캠벨 차관보는 이날 국내 중견 언론인과 조찬간담회에서 “만일 평양이 핵없는 한반도로 돌아가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포괄적 패키지를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포괄적 패키지에 북한이 유혹을 느낄만한 새로운 게 있느냐’는 질문에 “새롭고 매력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들이 무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고 “북한이 포괄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캠벨 차관보는 이어 “다음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관련국들을 방문할 때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최근 만난 중국 관료들은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소개한 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할지 현재 정리 중인 것 같다”고 말함.
- 캠벨 차관보는 특히 “현 상황에서는 압박이나 제재 국면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면서도 “여전히 문은 열려 있다”고 강



조합.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했던 점과 관련, “최근 몇 달간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5자간 협력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6자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명히 함. 캠벨 차관보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얼마 전 6자회담이 영원히 끝났다고 한 것과 관련, “6자회담을 중단시키는 것은 북한이 할 일이 아니다”고 일갈하고 “북한에 대해 최고의 방법은 나머지 5개국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또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기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과 우리가 외교적 트랙을 추구한다면 한국·일본·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캠벨 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됐던 미·중·일 고위정책협의회 문제에 언급, “2,3년 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중·일 관계가 좀더 좋은 환경에서 같이 일해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나 긴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함.

-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중국과 일본은 관계가 좋아졌으며 현재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우려는 한반도”라며 “현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경우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른바 5자 협의의 개념에 대해 한국정부와 일해왔다”고 말함.

나. 한·일 관계

● <日 민주당, 외교분야 변화 움직임>(7/23)

- “미·일 지위협정 개정 착수가 아니라, 개정할 것을 제기한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외정책 기조에서 변화 조짐이 확연하게 감지되고 있음. 외교 정책의 핵심인 대미외교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의 대등한 파트너십 확립을 전면에 부각해 온 민주당이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조성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임.
-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이 23일 공개한 민주당의 정권공약에 따르면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정 착수한다”는 그동안의 당 방침과 달리 “미·일 지위협정 개정할 것을 제기한다”고 상당히 완화된 표현을 사용함. 이는 지난 21일 중의원 해산 직후 실시된 이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로 자민당을 10% 포인트 앞서는 등 최근 들어 총선 승리에 이은 정권교체가 가시화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여당인 자민당의 외교 노선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던 야당 시절의 공약에 대해 자민당측이 “외교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등 강하게 비판하는 점을 감안,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 분야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임.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도 “정권교체가 눈



앞에 와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외교의 경우 상대 국가가 있는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함.

- 민주당은 그동안 인도양 및 이라크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강하게 반대해 오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미·일 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옴.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인도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위대의 미국 등 다국적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도 일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다만, 테러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약에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또 미·일 양국의 대등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신시대 미·일 동맹을 확립하고, 주체적인 외교전략을 구축해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짐.
- 아시아 외교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아시아 제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함. 동아시아의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고 명시함.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은 매우 중요하며, 가장 친밀한 국가로 신뢰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짐.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함께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희망한다”는 자민당의 기본 방침보다 한일 관계를 한층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 이미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5월 취임한 이후 첫 외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외교 관계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담은 공개 행보를 한 바 있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2차 핵실험 등을 실시한 것과 관련, 대북 추가제재를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하며 납치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적시함. 이는 “대화과 압력 노선을 유지하되, 압력에 중점을 둔다”는 자민당의 방침보다는 온화한 표현이지만 ‘국제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해결’이란 종전 입장보다 다소 강경론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것으로 읽혀짐.
-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주장하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대표 등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의원들로 민주당이 구성돼 있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임.

다. 미·중 관계

● 美-中, 북핵·한반도문제 논의(7/23)

- 미국과 중국이 27~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회 전략·경제 대화에서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함.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회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허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



- 핵화 실현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고 전제하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함.
- 허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874호 결의안 역시 정치와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유관 당사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 방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자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목표”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함.
 -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신장(新疆)위구르 사태도 미국이 원한다면 논의의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을 밝힘.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허 부부장은 위구르 사태는 전적으로 중국 내부의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원한다면 위구르 사태도 논의 의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함. 그는 20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우루무치(烏魯木齊) 사태는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며 중국정부의 불공정한 민족정책이나 종교의 자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함.
 -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투자한 자국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임.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장조리는 기자회견에서 “왕치산(王岐山)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미국이 책임 있는 경제정책과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달러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해 대미 최대 투자국인 중국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함.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출범시킨 제1회 전략·경제대화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 와 전략대화를 통합하고 수준을 격상시킨 것임. 중국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왕치산 부총리가,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각각 양국 정상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이끈. 양국은 이 채널을 통해 경제, 무역·통상 분야에다 외교안보 분야까지 포함시켜 중요한 현안과 공동관심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임.

라. 중·러 관계

● 中-러, 합동군사훈련 정식 돌입(7/22)

- 중국과 러시아는 22일 러시아 극동지방에 있는 하바로프스크에서 5일간의 반테러 합동군사훈련에 정식 돌입함. ‘평화사명 2009’로 명명된 이번 합동훈련은 지난 19일 준비 과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폭기 한대가 추락했음에도 예정대로 강행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참모총장은 이날 오전 하바로프스크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주변 국가들의 반테러상황에 대해 논의한후 합동훈련의 시작을 선언함.

-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1천300명의 육·공군 병력이 참가한 이번 양국 대테러 합동훈련은 지난 2005년 이후 3번째임. 양국은 하바로프스크에서 1단계 전략 훈련을 마친후 2단계 전술과 3단계 전역훈련을 중국 지린(吉林)성으로 옮겨 실시함. 훈련의 중점은 방공, 입체적 돌파, 기동, 포위등 4개 부문임. 인민해방군의 전폭기 1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9일 지린성 타오난(도<삼수변에 兆>南) 훈련기지 상공에서 훈련 비행 도중 추락, 이번 훈련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었음.
- 한편 서방 언론은 이번 중-러 훈련이 냉전시대의 유물을 연상케하는 동맹군 훈련이 아닌가 보고 주목하고 있으나 중국 측 이번 가상적을 상대로 하지 않는 순수한 반테러훈련이라고 해명함. 중-러시아간 이번 반테러 합동훈련은 올해 양국간 실시되는 25차례의 합동훈련의 일환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4월 18일 타지키스탄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병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합동군사 훈련에 나란히 참여함. 냉전시절 국경분쟁으로 한때 관계가 험악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서는 군사동맹체로 부상하고 있는 SCO를 창설했으며, 지난 2005년 첫 합동군사훈련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마. 기타

● 北매체, 한·미 을지연습 계획 비난(7/26)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6일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계획에 대해 “내용에 있어서나 규모에 있어서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 계획”이라며 이는 “평화보장과 대화의 간판 뒤에 숨겨진 검은 속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음.
- 북한 매체들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다음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한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 남북, 겨레말큰사전 본격 집필 합의(7/26)

- 남북한 언어학자가 공동 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제18차 회의가 지난달 열려 본격적인 사전 집필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했다고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7.25)가 전했다. 26일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이번 제18차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준비해온 어휘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본격적인 사전 집필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며 앞서 양측은 지난 16, 17차 회의에서 시범 원고를 제출했다고 밝혔음.



- 북측 사전편찬위는 현재 집필분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북과 남이 합의한대로 분기 간 500개의 새 올림말들을 계속 찾아내는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사전에는 남북 언어학자들이 수집한 어휘자료 가운데 양측이 공통으로 쓰는 것을 우선 올리고 차이나는 것은 합의해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이 오르게 되며, 올림말에선 발음, 원어, 문법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정보가 제공됨.
- 남북 공동편찬위는 2012년까지 사전 집필을 끝내고 2013년에 약 30만 어휘의 사전을 펴낼 계획.

● <美, 미얀마에 당근과 채찍 제시>(7/23)

- 미국이 아웅산 수치 여사 구금으로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미 정부는 미얀마가 수치 여사를 석방한다면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얀마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미얀마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책도 구사하고 있음.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 푸껫에 머물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미 정부는 미얀마의 변화를 희망한다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함. 가택연금 중이던 수치 여사는 미국인의 자택 잠입 사건과 관련, 가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높은 양곤의 인세인 감옥 내 특별재판정에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음.
-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 정부가 수치 여사를 석방한다면 적어도 미국만은 미얀마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미얀마와의 관계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과의 관계 확대 등은 전적으로 미얀마 정권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미얀마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국민에게 진정한 선거 기회를 제공할 경우 미얀마는 지금보다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함.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해있는 아세안이 미얀마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미얀마 당국이 수치 여사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아세안은 미얀마를 퇴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협력 우려와 관련, “북한과 미얀마가 어떤 무기와 관련한 협력을 하는 것 같다. 미얀마 지도부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을 본받아 고립을 피해야 한다”며 미얀마 정부에 북한과의 협력을 포기할 것을 촉구함.



● 美·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 체결(7/23)

- 미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을 만나 ‘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에 서명함. 우호협력조약에는 ▲양측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이 담김.
- 특히 이날 협정 체결에는 클린턴 장관이 전날 북한과의 군사협력설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던 국가인 미얀마의 니안 윈 외무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음. 클린턴 장관은 협정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다시 돌아왔다”고 선언함.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 지역이 전 세계의 발전 및 번영, 평화 유지에 필수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들과 맞설 것이라고 강조함.

● 클린턴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왔다”(7/22)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21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돌아왔다”고 표현함. 클린턴 장관은 22일 오전 태국의 한 TV토크쇼에 출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소홀했던 조지 부시 전임 정권과 차별성을 드러냄. 지난 2월 클린턴 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가 아시아였던 점도 이 같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임.
- 클린턴 장관은 미국이 아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상호 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함. 또 부시 전 행정부가 미국과 아시아 간 관계를 위해 좀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실수였다는 질문에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선을 언급하면서 미국인들은 매우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고 답함.
-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과 아시아 간 파트너십을 넓히고 심화시킬 적기이며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는 게 클린턴 장관의 설명임. 그녀는 또 부시 시절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 일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지역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한·중·일+아세안, ‘동아시아 협력성명’ 채택(7/22)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은 22일 오전 태국 푸껫 쉐라톤호텔에서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제2차 동



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사업계획'을 채택함. 공동성명은 과거 10년간 아세안+3체제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지역협력에 있어 아세안+3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임무, 정치·안보·경제·에너지·지속가능개발·사회·문화 등 분야별 협력 증진 방향, '아세안+3 협력 기금' 설립 추진 등을 담고 있음.

- 사업계획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 분야와 방향을 제시한 것임. 참가국들은 또 신종인플루엔자 위협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간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조기 감시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아세안+3 회원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신종플루, 재난관리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함. 23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대화상대 10개국, 그리고 북한과 몽골 등 27개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열림.

● 한·베트남 FTA 발효 2년...교역 76% ↑ (7/21)

-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2년 만에 양국 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관세청이 21일 한·베트남 FTA 발효(2007년 6월29일) 2년을 맞아 양국 간 교역동향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교역액은 179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의 107억 달러에 비해 76%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이 20% 증가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 FTA 발효 전 1년간 34억 달러 흑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는 발효 후 1년간 60억 달러 흑자를 보였고 2년차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44억 달러로 약간 감소함. FTA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으로 수출한 품목은 석유제품이 21.7%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계·컴퓨터, 자동차, 편직물, 플라스틱 제품, 철강 등이었음. 특히 자동차는 FTA 발효 전 2년간 수출액이 4억 달러에 머물렀지만 발효 후 2년간 13억 7천만 달러로 228% 증가함.
- 수입 품목은 어류가 1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유, 전기제품, 석탄, 신발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석탄은 FTA 발효 후 수입이 221%나 증가함. 양국 간의 FTA 발효 후 2년간 베트남에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은 수출액은 2억7천만 달러로 이중 전기제품이 가장 큰 혜택을 봤고 베트남 수입물품 중 국내에서 특혜를 적용받은 금액은 17억 달러이며 어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베트남 수입물품에 제공한 특혜가 우리나라의 수출품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일정이 개발도상국인 베트남보다 빠르기 때문임. 한편 관세청은 한·베트남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베트남 현지의 통관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30일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어 11월 호찌민에서 FTA 설명



회를 열 계획임.

● 美-印, 국방·핵 분야 협력 합의(7/21)

- 미국과 인도가 국방 및 핵 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기로 합의함. 인도를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일 S.M. 크리시나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촉진과 미국 기업의 인도내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한 양국간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미국산 첨단 무기의 대인도 판매를 위한 안전장치인 ‘최종 사용 감시(end use monitoring)’에 합의했다”며 “이로써 미국과 인도는 더 큰 틀에서 국방 분야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최종 사용 감시’는 미국이 수출한 첨단 무기가 악용되거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판매된 무기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제3자에게 재판매되는지를 감시할 수 있음.
- 이날 합의로 양국은 최신예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무기를 거래할 수 있게 됨. 특히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 미국 전투기 제조업체들은 사상 최대규모인 인도의 전투기 교체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됨. 또 인도가 미국 기업에 원전 건설에 관한 독점 권한을 부여한 이날 합의로 양국은 지난해 민간 핵협정 체결후 처음으로 민간 핵 기술 거래의 물꼬를 틔. 이 밖에도 클린턴 장관은 이날 만모한 싱 총리가 오는 11월24일 미국 국빈방문을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힘.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싱 총리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첫 외국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함.

● 美 국무부 예산 25% 증가(7/20)

-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적극 추진하면서 미 국무부의 내년 예산도 25% 증가함. 최근 미 하원 및 상원의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국무부 및 외교 관련 예산은 510억달러로 작년 407억달러에 비해 25% 증가했고, 2005년에 비해서는 거의 50% 증가함. 내년 국무부 예산에는 1천300명의 외교관 증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대외지원 및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음.
- 국무부의 제이콥 루 관리담당 부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대외이미지 변화를 추구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중대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말함. 국무부의 예산 증가율은 국방부의 예산 증가율을 앞지르는 것으로 내년 국방예산안은 2% 증액에 그쳐 6천640억달러 규모임. 이중 전쟁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예산의 경우 4%, 205억달러가 증액됨. 총액면에서 볼때는 국방부 예산이 국무부에 비해 13배나 많지만 의회가 외교관



련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중인 외교관 증원과 대외개발원조 증액을 승인한 것은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관행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것임.

- 특히 의회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련 예산을 소폭 삭감하며 행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승인함. 상원의 외교관련 세출예산은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에 비해 2% 모자라는 8천240억달러임. 또 전통적으로 대폭적인 삭감대상이 되어온 대외원조예산은 323억달러로 2009년 340억달러에 비해 약간 감소했지만 2008년의 267억달러에 비해서는 대폭 증가한 것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낸 마크 그로스맨은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 시절에도 국무부 예산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밝힘.

● 반기문 총장, 23일 訪中(7/2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20일 발표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 같이 발표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반 총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지도부와 만나 한반도와 국제 및 동북아 정세를 논의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등 외교부 관계자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짐.

● 인도 “중국을 경계하라”(7/20)

- 인도는 중국이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자 위협을 느끼고 중국의 미사일과 해군력 증강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인도 내각의 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중국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 미사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수집센터를 창설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중국의 쓰촨신문왕(四川新聞網)이 20일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 보도함.
- 정보수집센터는 중국의 미사일과 핵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 안전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하는 한편 인도 중앙정보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인도의 정보수집센터설립안은 중국이 최근 칭하이(青海)이 사정 5천km의 미사일을 새로 배치했는데도 인도 정보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됨. 사정 5천km의 장거리 미사일은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등 4개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데 이중 3개국은 중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미사일은 결국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 당국의 판단임.
- 인도는 또 중국이 인도양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와 관련, 인도양에서 해군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설립할 계획임. 앞서 인도는 지난 6월 중국과의 국경 지대인



북부 아삼주(州) 테즈푸르 공군기지에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30 MKI 5대를 배치함.

- 인도는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병력 6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중국의 통신 설비기업인 화웨이(華爲)와 휴대전화 메이커인 중싱(中興)의 자국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아세안, 인권위원회 설립키로(7/20)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회원국은 역내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립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20일 보도함.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9일 태국 푸껫에서 열린 외교장관 실무회담에서 아세안 인권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데 합의한 뒤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인권위원회 설립을 공식 승인할 예정임.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권위원회 설립이 공식 승인되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정상 회담에서 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아세안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에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아세안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 등 2천여명의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 등이 포함돼 있음.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20일 오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초창기에 아세안 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보다 인권을 촉진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인권보호 부문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밝힘. 인권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아피싯 총리는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이 촉진되면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도 생길 것”이라고 말함. 카싯 피롬야 태국 외무장관은 “인권위원회가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아세안 회원국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함.



[참고 1] <北리홍식 국장 ‘ARF회견’ 문답> (연합뉴스, 7/23)

(푸켓=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태국 푸켓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포럼(ARF)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의 리홍식 외무성 군축국장은 23일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원인”이라며 대화를 하려면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국장은 미국이 제안한 이른바 ‘포괄적 패키지’에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패키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북한 대표단은 21일 푸켓에 도착한 이후 입을 열지 않다가 이날 ARF 오전 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인 웨라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한 듯 열변을 토했다.

다음은 리 국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조선반도의 현 위기 상황의 본질은 바로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결과다. 그것은 어제오늘 비롯된 문제가 아니며 역사적으로 계속된 문제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 박 단장이 회의에서 이야기했다. 이 문제는 남조선과 일본에 미국의 방대한 무력과 최첨단 무기가 존재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즉,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감이 해소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6자회담도 이미 종말을 고했다. 그것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며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일문일답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포괄적 패키지를 제안했는데.

▲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다. 이것은 이미 부시 행정부 시기에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다. 우리가 핵폐기를 하면 이것저것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된 계기가 뭘지 생각해 보라. 핵무기를 가지게 된 근본 요인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 적대정책이고 여기서 이 문제가 파행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전과 자주권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담보 없이 안전과 자주권을 몇 푼 돈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채 어떻게 패키지를 얘기할 수 있는가.

--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인가.

▲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이) 속에 칼을 품고 있는데 대화할 수 있겠나.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 북미수교에 대한 입장은.

▲ 그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칼을 빼면 칼을 빼는 거지 (왜 우리한테 핵을 폐기하라고 하나). 우리는 작은 나라다. 주변에 방대한 무력과 최첨단 무기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냐.

▲ 칼을 뽑아야(버려야) 대화를 한다. 언제 칼을 뽑을지 모르지 않냐.

-- 안보리 결의에 대한 입장은.

▲ 유엔 안보리 제재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이미 제재를 받아왔다.

-- 5자협약에 대한 입장은. 6자회담에 복귀할 생각은 있나.

▲ 우리와 상관없고 하든 말든 관계없다. 6자회담은 이미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근로자와 미국 여기자 문제는.

▲ 우리 외무성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

-- 미국 또는 일본과 이번 ARF에서 만났나.

▲ 만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 일본도 사실은 (안보리에서) 제일 앞장서서 방해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반세기 동안 우리를 간섭한 것으로도 모자란 건지.

--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 미국에 달려 있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23/0511000000AKR20090723185800043.HTML>



[참고 2] 柳외교 ARF 기자회견 문답 (연합뉴스, 7/23)

(푸켓=연합뉴스) 이우탁 유현민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이번 (아세안 관련)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며 “많은 참가국들이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23일 태국 푸켓에서 아세안(동북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비핵화의 최종 목적인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아직 그 문제는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고 협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이른 단계”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 장관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금번 다자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매우 비중 있게 다뤄졌다. 19~20일 양일간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반영된 결과문서가 채택됐고 이어 아세안+3 등에서도 다수 참가국이 북한 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우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타 참석 대표들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했다.

어제 미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과 회담에 이어 오늘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북핵 문제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의 성 김 특사를 비롯해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 참가국 대표 및 관계자와 만나 협의를 가졌다. 5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형식의 협의는 아니지만 이런 연쇄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관련국들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현시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공감했다. 앞으로 관련국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일문일답

--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달라.

▲ 그 문제는 원칙적인 개념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는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이른 단계다. 다만 지금까지 6자회담이 단계적 접근으로 낮은 단계에서 계속됐는데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그런 점진적, 단계적인 접근



이 효과적이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구상이 나왔다. 비핵화의 최종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모색점이 필요하다는 개념적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충의 구상을 갖고 있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 포괄적 패키지와 관련, 이번에 진전된 내용이 협의됐다.
 - ▲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언급할 정도는 아니다.
- 북한이 사실상 미국의 패키지 구상을 거부했는데.
 - ▲ 북한 외무성의 국장이 얘기했다는 것인데 현재 북한은 6자회담도 영원히 안 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그런 것 다 감안해 관계국간 협의를 통해 오늘도 ARF에서 모든 관계국 장관이 6자회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도 없고 개념 단계다. 오늘 북한 대표의 발언을 보면 북핵 문제를 미·북 양자구도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개발 이유를 전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이 아직 안 나왔는데.
 - ▲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나 오늘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의장국인 태국에 전달했고 이는 여타 국가도 마찬가지다. 다만 의장성명은 의장국의 고유 권한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다. 회람되는 대로 공개될 것이다.
- 다자회의장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유모 씨 문제 언급했다.
 - ▲ 언급하지 않았다. 그 문제는 주로 양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고 ARF나 아세안+3, 한·아세안에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 포괄적 패키지가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한가.
 - ▲ 그것도 하나의 참고는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성안한 단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말하기 이르다.
-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와 접촉 있었다. 회의 기간 미국과 북한의 접촉 있었다.
 - ▲ 내가 알기로는 미·북간 접촉은 없었다. 나는 어제 저녁 태국이 주최한 갈라 디너(만찬)에서 북한의 박근광 대사가 가까이 있어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간단하게 남북한 현재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이할 만한 것은 없었다.
-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 있었다.
 - ▲ 중국이 아주 명시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두드러지게 인상에 남았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모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 포괄적 패키지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없고, 개념적 차원에서 현재의 제재 국면 이후의 단계에서 새로운 어프로치를 논의해 나가자는 선에서 서로 얘기했다.

lwt@yna.co.kr, hyunmin623@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23/0511000000AKR20090723205600043.HTML>

 국제관계연구센터